

발행일 2018. 9. 14.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발행인 박재욱  
주 소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 (선화동) Tel. 042-530-3500 Fax. 042-530-3528  
제 작 ㈜봄인터랙티브미디어

## 대전시 경청·소통 시민참여행정 활성화 방안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유병선**

### I. 서론

- 대전광역시는 민선6기 출범과 더불어 시민행복위원회, 명예시장제, 현장시장실, 경청신문고, 아침동행, 시민과의 대화, 사랑방 경청회, 주제가 있는 시민토론회 등 경청·소통 및 시민참여행정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 오
- 민선6기 대전광역시가 시행해 온 경청·소통 및 시민참여행정 관련 제도의 추진현황, 성과, 문제점 분석을 통해 정책 수요자 중심의 협치 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방향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 II. 시민참여행정 제도 개선 방향

#### 1. 시민행복위원회 운영의 개선방안

- 시민행복위원회가 다음 세대까지 물려줄 수 있는 제도적 자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대전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대의민주제로 대표되는 엘리트민주주의에 고착된 사고를 넘어 '보통 사람들의 사고'를 통해 대전시의 중요한 가치를 배분한다는 숙의민주제의 기본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함
- 수동적 의미의 시민참여(정보 제공·상담·의사결정과정 파트너)가 아닌, 시민들의 손에 대전시의 중요한 가치판단 권한을 부여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시민행복위원회의 개선과제를 모색해야 함
-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의제선정 및 절차를 진행하는 전문가위원회의 구성과 독립적 운영, 이슈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도출된 결과가 정책권고안 수준으로 성안될 수 있도록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 구체적으로, 시민행복위원회가 숙의민주제의 의미를 가지도록 뿌리내리는 초기단계만이라도 숙의민주제에 전문성을 가

진 인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의견수렴과 대전시와의 조율과정을 거치도록 권고하되 의제선정의 최종권한을 운영위원회에 부여하며, 전체 기획 및 진행을 주도해 나가도록 하는 재량과 권한을 주어야 할 것임. 의제가 정해진 후에 명확한 문제의 정의와 설명을 통해 시민위원들이 해당 의제에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제정리위원회'(content committee)와 같은 제도를 병행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임

- 시민행복위원회와 같은 숙의제도가 대전시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대전시민의 결정이 구속력을 가지고 실제 대전시 정책에 반영되고 그 결과가 시민들에게 환류되는 경험이 필요함. 대전시 시민행복위원회 운영은 일종의 시민여론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을 뿐 대전시의 최종적 의사결정에 유의미한 변화를 초래한 사례는 없었음

#### 2. 시민공론플랫폼 구축을 통한 경청신문고 제도 보완

- 경청신문고가 가지고 있는 시민참여 행정제도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안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지속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전광역시의 온라인참여시스템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경우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시스템을 활발히 이용하는데 비해 대전시는 매우 저조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기존의 국민신문고 활용을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됨
- 인터넷을 통한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 홈페이지의 일부 게시판을 이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독립적인 시민참여 홈페이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1번가'가 시민의 큰 주목을 받았던 점을 벤치마킹하여 대전형 '문재인 1번가'를 개발할 수 있을 것임. '문재인 1번가'가 성공한 이유는 시민들에게 익숙한 쇼핑물 방식을 차용하여 복잡한 정책을 친숙하고 신선하게 전달했기 때문임

## Ⅲ. 시민참여행정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 1. 풀뿌리주민자치 생태계 조성

- 시민사회로 상징되는 Habermas의 공론장(public sphere)에서의 공개성에 입각한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토의과정은 민주주의에 적합한 시민을 육성하며, 공론장에서 형성된 의사소통권력은 정책결정자들에게 압력으로 행사될 수 있음. 따라서 숙의민주제를 포함한 지방민주주의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론장의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함
- 시민사회의 공론장의 의미는 일상적 삶의 과정 속에서의 의사표출과 의사결정, 지역과 세계적 쟁점에 대한 관심 등을 의미하는 '생활자치'의 개념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생활자치는 생생한 현장인 로컬(local)의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볼 것을 요구함
- 대전광역시 전반기 시민참여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단위의 공론장에서 출발하는 생활자치 또는 풀뿌리주민자치 기반 구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됨.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시민참여에 의한 마을의제형성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방법을 주민 스스로 모색하는 정치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시민참여행정을 위한 처방이 될 것임

### 2. 기존 참여제도의 정비 및 개선

-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제도의 양적 확대도 필요하지만, 현존하는 제도의 질적 개선 또한 중요함. 법적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개최하는 공청회, 위원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행정 분야별 소규모 포럼을 정례화하고, 전문가 위주의 포맷이 아닌 일반 시민위주의 대화의 장으로서 포럼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부서장이 새로운 사업이나 안건에 대한 발표 후 일반 시민과 전문가가 질의 응답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음
- 상대적으로 참여의 기회가 적은 빈곤층의 욕구와 서비스 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포커스 그룹과 같은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내부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소상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 및 정책집행단계에서도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공론의 장을 통해 행정 및 정책결과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야 함
- 자문위원회 운영의 경우도 위원회 논의사항에 대한 이후의 정책결정과정과 정책내용의 변경사유, 그리고 집행결과를 위원

들에게 알려주는 피드백 과정이 이루어져야 함

### 3. 참여유인 제공을 위한 제도적 노력

- 대전시가 시민참여행정제도를 설계할 때 개인의 참여유인 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에 세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참여의 비용을 줄이는 것 : 회의시간을 저녁에 잡는 것, 아동보호비용을 지불해 주는 것, 회의를 짧게 하는 것
  - 직접적 편익을 증가시키는 것 : 참여를 통해 사회화의 기회를 증가시키는 것
  - 정책결정에 대한 참여의 영향을 좀 더 명확하게 만드는 것 : 지역언론으로 하여금 참여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
  - 정책쟁점과 정책과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 4. 민주시민교육 강화

- 제도적 장치만으로 주민참여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면에서 시민교육을 통한 주민참여제도의 이해와 참여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함. 이러한 교육의 주체로서 학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전통적으로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은 학교의 중심기능을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정신을 교육하는데 두고, 공격 심의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가치와 태도 등을 갖추도록 훈련하고 있음
- 대전의 시민참여행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민주적 가치와 태도, 시민성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과 학습방식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사회가 이를 적극 촉진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함
- 대전시 평생학습시스템을 통해서도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민주시민교육의 비중이 미미한 대전시민대학과 5개구의 평생학습센터,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시민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시민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광역도시의 평생학습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8월 대전 경제동향



## 종합평가

**경제**는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2018.6월)가 96.5로, 전월대비 1.23p 감소하여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음

**개별지표**에 있어서는 전월대비 고용상황이 개선된 반면, 생산과 건설경기가 부진하고, 소비가 위축되고 수출이 감소함. 전년동월대비로도 소비가 활발하고,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생산과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고용상황이 악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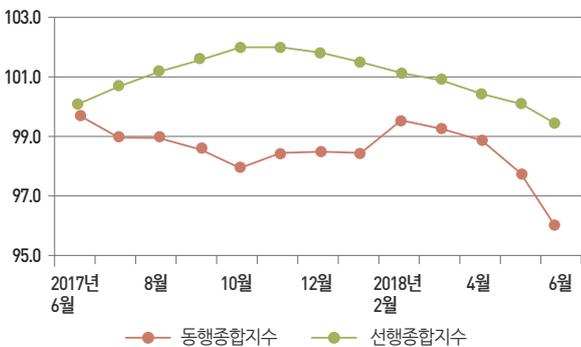
**한편**,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생산과 투자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 무역갈등 심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 개선, 수출호조, 추경집행 본격화 등 긍정적 요인이 있으나 고용 상황이 미흡한 가운데, 무역갈등 지속,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국제유가 상승 등 위험요인이 상존함

**따라서**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경제 활력 제고 노력과 함께 일자리 창출 및 민생 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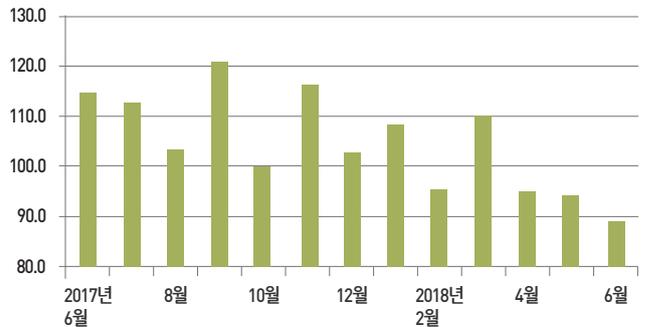
### 01

#### 경기지수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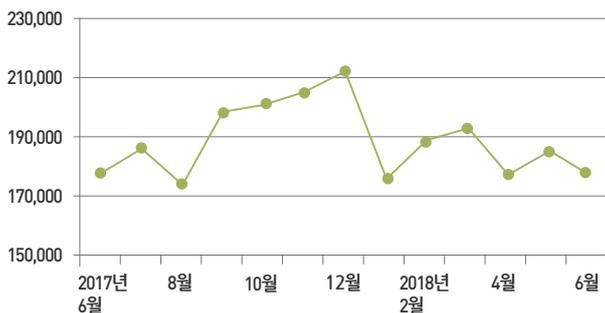
### 02

#### 생산 제조업생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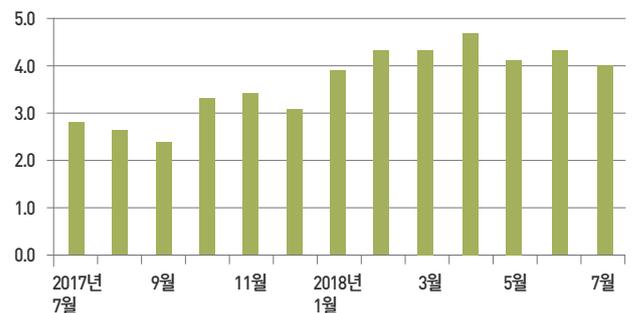
### 03

#### 소비 대형소매점 판매액



### 04

#### 고용 실업률



# 8월 세종 경제동향



## 종합평가

**소상공인** 체감지수는 2018년 1월 크게 하락하였다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4월부터 하락하면서 7월에는 60.0%로 전월 대비 4.0% 하락하였음. 반면, 소상공인 경기에 대한 전망지수는 전년 동월, 전월 대비 모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생산측면**에서는 광공업 생산지수와 출하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재고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크게 증가함. 전국의 광공업 생산, 출하, 재고지수 또한 모두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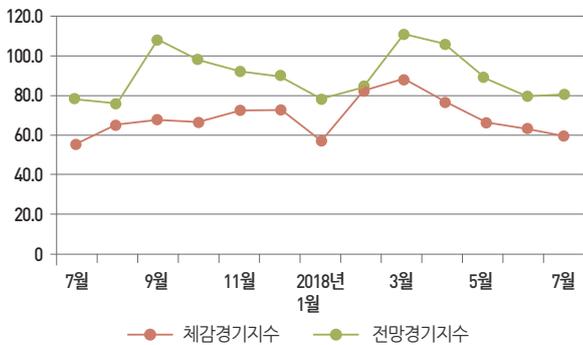
**7월 주택매매** 가격지수는 103.3로 전년 동월(101.5) 대비 1.8% 증가, 전월(103.1) 대비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6월 주택전세 가격지수는 99.4로 전년 동월(100.3) 대비 0.9% 하락, 전월(99.9) 대비 0.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7월 경제활동** 인구는 15만 6천명으로 전년 동월(13만 5천명) 대비 15.6% 증가, 전월(15만 4천명) 대비 1.3% 증가함. 취업자는 15만 2천명으로 전년 동월(13만 3천명) 대비 14.3% 증가하였고, 전월(15만명) 대비 1.3% 증가함

**7월 실업률**은 2.5%이며, 전년 동월대비 0.8%p 증가하였고 전월대비 0.2%p 증가함. 7월 전국의 실업률은 3.7%이며, 세종시는 전국에서 제주도(1.9%), 전라북도(2.2%), 경상남도(2.3%) 다음으로 낮게 나타남. 세종지역 실업률은 2017년 6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17년 11월 3.1%로 정점을 나타냄. 최근에는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7월 실업률은 전 달보다 다소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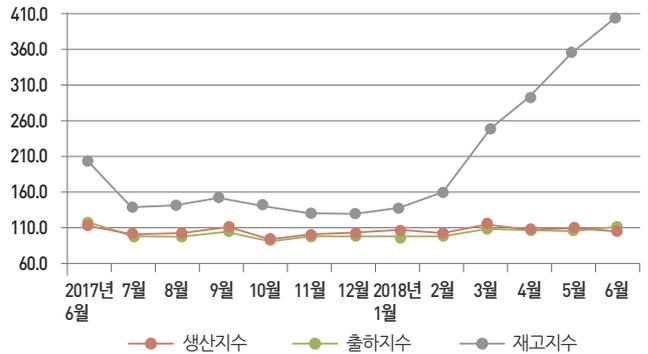
### 01

#### 경기지수 소상공인 경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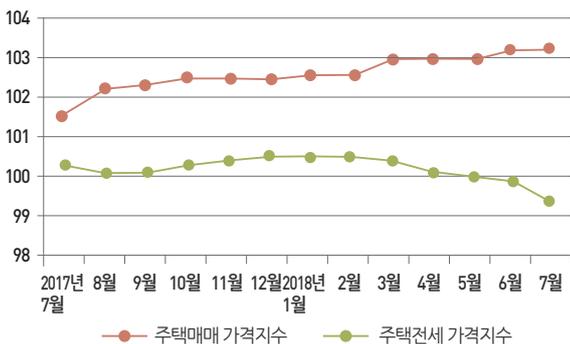
### 02

#### 생산 광공업 생산지수 추이



### 03

#### 부동산 부동산 가격지수



### 04

#### 고용 실업률

